

## 금융 실명제의 파급 효과와 대책

거시경제분석팀

8월 13일부터 대통령의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금번 금융 실명제의 실시는 금융 시장에서의 충격은 물론 우리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 실명제가 미치는 파급 효과와 부작용 및 대책을 점검해보고 나아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을 마련해 보았다.

### 개요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60년대 초부터 저축 유인과 자금 동원의 효율화를 위해 가명 금융 거래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명 금융 거래가 탈세와 불법 금융 거래 등 각종 불건전한 관행을 생성시킴에 따라 국민의 정서를 저해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및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 실명제 실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 82년과 89년에 구체적 실시 계획이 마련되기도 하였지만 경제에 주는 충격을 우려하는 일부 여론에 밀려 실시 자체가 유보되었다. 결국 8월 12일에 과거 두차례에 걸친 실명제 실시 무

산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음성 자금의 금융권 이탈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 수단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골자는 먼저 금융 실명제의 대상은 모든 금융 기관과의 거래로하고 기존의 비실명 금융 자산은 2개월 이내에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금융 자산은 인출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금번 실시된 금융 실명제는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여 건강한 민주주의와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를 정착시켜 정치·경제의 선진화를 꾀함은 그 근본 취지로 하고 있다. 과거의 실시 계획보다 포괄적이고 처벌 규정도 한층 강화되었으며 금융 정보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한편, 이러한 금융 실명제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보다도 실제 명의에 의한 금융 거래를 법제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탈법적 정치 자금 등의 매개 수단이었던 비실명제도가 해체되고, 불공정 변칙 금융 거래 및 지하 경제의 축소를 가져와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합리적 금융 거래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금융 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로 소득 종류간, 소득 계층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소득

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조세의 세원 관리가 용이하게 되어 조세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 발전은 물론 경제의 형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파급 효과

### 단기적 경기 위축 우려

금융 실명제는 단기적으로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없어지고 기업 경쟁의 효율이 높아져서 경제 활성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명제는 단기적으로 금융 질서의 교란을 가져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금난을 초래하여 설비투자의 증가를 지연시키며, 그 영향은 94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실명제 실시에 따르는 수요 감소 효과에 의해 실시 이전보다 안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유통 시장의 교란에 따르는 상품 수급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금융 기관에서 인출된 현금 통화가 소비 자금으로 전환될 경우에 물가 상승폭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표 1> 금융 실명제의 주요 내용

실명대상	- 모든 금융 기관과의 거래 일체 예·적금 계좌 개설, 은행자기앞 수표와 CD의 발행 및 지급, 주식·채권(무기명포함)의 매매
기존비실명자산처리	- 비실명인출 일체 불허 - 실명전환 의무기간을 2개월로 하고 이 기간이후 실명전환에 대해서는 90%의 높은 이자·배당소득세 및 매년별 최고 60%까지의 과징금 징수. 기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CD를 실물로 보관하다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경우, 점포별 5천만 원 이상 일때 국세청에 통보 - 단, 실명전환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년내 시정시 동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을 1년간 면제
실명확인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실명전환자에 대한 조치	- 연령별로 기준을 차등화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자금 출처 조사 면제 - 실명전환전의 명의를 비실명으로 보아 과거에 부족 징수한 5년간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징
비실명자산소득과세	- 실명 자산의 21.5%에 비해 4.5배 수준인 96.75%로 차등 과세
금융정보비밀보장	- 정보제공 요구절차 요건 ·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 · 문서에 의한 요구 · 금융기관 점포별로 요구 - 금융기관에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거부 의무 부여 - 비밀보장 위반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

<표 2>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 예상

	93년 상반기 실적	93년 정부 목표치	실명제 후 93년 전망
경제성장률	3.8%	5.8~ 6.0%	4.5~5.0%
소비자물가 상승률	4.2%	5.0% 내	6.0%내외

금융 실명제 이후 아직 별다른 부작용 없어  
93년 7월말 현재 금융 시장의 借假名 計

座가 32조 9,500여 억원으로 전체 금융 자산 330조 원의 10%, 총통화 100조의 1/3에 달하여 당초 금융 실명제 실시되면서 큰 교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다.

그러나 8월 25일 현재 현금 통화 발행이 늘어나고 부도율이 약간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권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이탈, 연쇄 부도 등 부작용은 아직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차가명 계좌의 실명 전환 실적이 아직 미미하여 금융 실명제 실시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실명 전환의 마감일인 10월 초가 되면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26일 현재 32개 국내 은행과 51개 외국 은행의 계좌에서 실명 확인 또는 차가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은행 계좌는 금액 기준으로 47.5%에 달하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실명인 계좌가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가명 계좌의 실명 전환율은 금액 기준으로 27.8%에 불과하다.

<표 3> 금융 실명제 이후 금융 동향

구분	단위	8.1~12	8.13~25
현금 통화	억 원(증감)	-2,919	11,287
은행 여신	“	6,829	10,727
은행 수신	“	3,337	17,900
단자 수신	“	-964	-2,311
부도 업체수 (서울, 평균)	개	11.9	12.5
부도율(서울)	%	0.05	0.07
콜금리	1일물(%)	15.0	12.8
회사채	3년(%)	13.4	13.9
종합 주가	포인트	721.0	709.3

자료: 한국은행.

### 금융 시장별 영향

금융 시장을 분야별로 보면, 우선 은행권에서는 실명제 이후 여수신 실적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신의 증대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 어음 할인의 확대 때문이고, 수신은 증대는 공무원 급여, 지방 교부금 등 재정 자금이 집중 방출되었기 때문으로 순수한 의미의 고객 수신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권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은 실명 전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가시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만기가 91일 이상 180일 미만인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CD)는 만기시 실명화의 과정에서 CD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았던 일부 금융 상품의 수신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후 생활 연금 신탁, 근로자 장기 저축, 목돈 마련 재형 저축 등은 통상 1,500만 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이 주어져 거액 예금을 차명 계좌로 나누어 예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명제 실시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은 종합주가지수가 실명제 실시 직후 크게 폭락한 이후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려했던 주가 대폭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식은 93년 7월 말 현재 비실명화율이 3.1%로 금융권중 가장 높아 실명화 과정에서 자금의 제도권 이탈로 시중 자금 경색이 초래되고 새로운 투자 자금 유입도 위축될 경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울 것이다. 더욱이 금리가 급등하고 중소기업 부도 사태가 확산될 경우에는 주식 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다.

앞으로의 주식 시장은 금융권을 이탈한 자금이 주식 투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자금 투자처를 찾기 힘들어 주식 시장 유입이 가속화되고 정부의 주식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된다면 견조한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다.

채권 시장에서는 실명제 실시 이후 극도의 거래 부진으로 채권 유통 수익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채권 시장은 채권 거래의 대부분이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CD 등 채권 거래의 양성화에 따라 개인 자금의 채권 시장 이탈이 예상되어 유통 시장의 불안정이 우려되고 나아가서 발행 시장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채권 시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상속세,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무기명 장기 채권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채권 매수세가 살아나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단자권은 금융 실명제 이후 수신액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단자권 전체 수신의 10%인 2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비실명 계좌가 단자권을 이탈한다고 해도 다른 금융 기관에 갈 곳은 마땅치 않고 한국은행도 단자사에 대한 적극적 자금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은 중개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가차명으로 거래하던 자금들

이 빠져나가고 만약 금리 자유화를 실시할 경우에는 은행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단자사의 영업 기반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종합 금융 회사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한편, 私債 市場은 그동안 신용·무담보 대출 등 제도권 금융이 할 수 없었던 부문을 담당해 왔었는데, 제도권 금융이 이를 대체할 만큼 성장하지 못해 당분간 위축되었지만 상당 기간 존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금의 제도권 이탈 가능성

금융 실명제 실시에 따라 비실명으로 된 금융 자산이 금융 기관에서 빠져나와 부동산으로 이동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초세 등 법제가 강화되어 있고, 금융 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 거래시 자금 출처 조사 실시, 토지 거래 허가 및 국세청의 특별 관리 대상 지역의 확대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자산은 과세 표준이 완전히 현실화 되는데 반해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아직도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여전히 금융 자산 수익률 보다 높아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리고 자금의 해외 도피도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달러화나 엔화에 대한 암시장 거래가 형성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 사회의 합리화

금융 실명제는 기존의 음성적인 정치 자금의 흐름이 단절되어 깨끗한 정치 풍토의 정착이 기대되고 일반 개인의 자금 소비 패턴도 보다 건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각종 음성적인 거래로 탈세를 해온 호화 사치성 향락 산업의 존립 기반이 금융 실명제 실시로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음성적인 자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따라 그동안 사회적 위화감을 주었던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치권에 주는 충격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여 과거 보스 중심형 정치나 은밀한 정치 자금 수수 정치에서 공조직 중심의 공개된 정치 활동으로 이행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은 실명제 질서에 맞는 선거 제도 및 정당 조직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의 또다른 변화는 앞으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각계 각층의 이해를 대변할 전문 로비스트 회사가 점차 발달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실명제의 예상 부작용과 대책

### 예상되는 부작용

금융 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증권 시장 교란, 은행의 금융 거래 위축, 부동산 투기 재연, 자금의 해외 유출 등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대외 신인도가 낮아 은행은 물론 주식, 채권 등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무담보 대출이 비교적 용이한 私債 市場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로 사채 시장이 위축되어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실명제 실시에 따르는 세무 자료의 현실화로 그동안 무자료 거래에 익숙해져 있던 중소기업의 거래를 단기적으로 위축시켜 자금 순환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를 노정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비실명 주식 및 채권 거래 자산의 이탈로 증권 시장의 교란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금융 실명제의 실시로 이른바 검은돈 이외에도 심리적 위축감을 느낀 일반 금융 거래자의 은행 이탈이다. 특히 이러한 이탈 자금이 금융권에 들어오지 않고 개인 금고에 쌓여 퇴장되는 경우에 통화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기의 재연, 상거래 위장 개인 송금, 휴대 반출에 대한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상존한다.

### 정부 대책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의 마련을 통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저축의 제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자금 지원 대책을 마

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에서 위탁 보증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이의 타은행으로 확대 실시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둘째, 증권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 차익 과세를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중 유보하고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 독려, 투신사 국고 차입금(1 조원)의 단계적·점진적 상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셋째, 은행권으로부터의 일반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9월부터 CD의 최저 발행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가계 수표의 장당 발행 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현금 입출금기로도 다른 은행으로의 입금이 가능하도록하고, 10월부터는 소액 가계 저축 등 세금 우대 저축의 가입 한도도 늘리기로 하였다.

넷째, 부동산 투기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설치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하며 지가 동향 감시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송금에 대한 금융 기관의 국제청 통보 기준을 1 회 3 천 달러 이상, 연 1만 달러 이상으로 강화하고 자금 해외 유출 혐의자 및 해외 부동산 취득자의 특별 세무 조사를 실시하며 수출입 물품의 가격 적정성 조사를 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각종 보완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 정

상 자금이 심리적 불안감으로 금융 기관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거래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 원칙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금융 실명제의 부작용이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 보완되면서 조기 정착 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각 경제 주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예상외로 빨리 금융 실명제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의 대응

금융 실명제 실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금융 거래의 정상화, 지하 경제의 양성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경제 회복 지연,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금융 시장의 불안정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해 기업은 단기적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기업내 유동성 조절이 필요하게 되며, 거래 기업의 신용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연쇄 도산을 방지해야 한다.

기업은 우선 유동성 조절을 위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실명 유가 증권의 일부 처분 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사내 현

금 보유를 늘려 만약의 경우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기업 운영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창구를 간접·직접 금융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화하며, 사내 자금의 순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판매 조건을 바꾸면서라도 자금 회수가 빠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단기적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리스크의 회피를 위해서 기업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필요 불가결한 자금 수요는 미리 확보해야 하겠지만 그 이외의 지출은 금융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금리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연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 실명제의 실시에 따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우수 협력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래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은 장기적으로 비자금 사용을 축소하고 기업의 기획이나 재무 활동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표4> 기업에 미치는 영향

肯定的 要因	否定的 要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의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 사회 기반 구축</li> <li>- 금융·자본의 거래 질서의 공정성</li> </ul> </li> <li>○ 지하 경제의 양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 불로소득 근절</li> <li>- 투기성 거래의 양성화로 시장 안정 기능 회복</li> <li>- 조세 부담의 공정성 제고</li> </ul> </li> <li>○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시각의 긍정화</li> <li>- 富의 축적에 대한 회의 부정 시각 교정</li> <li>- 기업의 준조세 부담 경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회복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시장 불안정화로 기업 투자 집행 관망세</li> <li>- 무차별적인 자금 출처 조사로 경제 활동 위축</li> <li>- 제도권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 위축</li> </ul> </li> <li>○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자료 거래 기업체의 판매 위축</li> <li>- 사채 의존 중소기업의 부도 위험 증대</li> </ul> </li> <li>○ 금융 시장의 불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실명 금융 자산의 제도권 금융 이탈</li> <li>- 조세 포착률 증대로 조세 부담 가중</li> </ul> </li> </ul>